

민주노총 정치방침 10문 10답

# 민주노총 정치방침, 노동자계급정치를 복원하자



사노위.

## 민주노총 정치방침, 노동자계급정치를 복원하자

민주노총은 2009년부터 제 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기치 아래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1년 현재, 진보대통합당 건설은 좌초되고, 민노당-통합연대-국참당의 3자 통합이라는 소통합으로 귀결되었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았던 민노당이 자유주의 정당인 국참당과 통합하자, 3자통합당(통합진보당)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둘러싸고 민주노총 안팎에서 논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지도부가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자동승계하려 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찬반 논쟁 및 배타적 지지방침 그 자체를 둘러싼 격론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은 정치방침과 선거방침을 분리한다는 입장 아래, 12월 13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에서 2012년 총선방침을 결정하였다. 정치방침은 2012년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는 계획에 따라 산하조직 토론을 전개할 계획이다. 민노당 건설 전후 시점, 민노당 분당 시점에 이어 또다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한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 경제위기의 심화, 노동자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적 제권리 파괴로 인한 대중들의 삶의 고통 심화, 새로운 정치에 대한 대중의 열망이 강화되는 가운데 총대선이라는 중요한 정치일정이 있는 2012년. 나아가 대선 이후 새롭게 형성될 정세 아래서 노동운동(민주노조운동)은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어떤 계획과 방침을 가져야 하는가. 이는 현재 민주노총 내에 정치방침을 둘러싸고 논쟁이 형성되고 있는 지점에 대한 답과 함께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내용이다.

이에 사노위는 ‘민주노총 정치방침 정립을 위한 제언’을 10문 10답의 형식으로 답았다. 10문 10답이 노동자계급의 염원인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노동해방 쟁취를 위한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

# 01

## 3자통합당(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인가?

통합당은 강령에서도 노동자정치의 원칙을 이탈하고 노동중심성을 내팽개친 채 신자유주의 세력과 야합한 정당이다. 노동자정치를 신자유주의 세력에게 팔아넘겨버리고 진보를 참칭하고 있는 통합당은 결코 진보정당이 될 수 없다.

3자통합당은 자신들이 ‘진보정당’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3자통합당은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이해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이 아니다.

3자통합당의 한 주체인 국참당은 신자유주의세력이진 진보세력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진노사관계를 말하며 교섭창구 단일화로 복수노조를 무력화시키고, 공무원노조의 노동기본권 투쟁을 탄압했으며, 통상국가 운운하며 한미FTA를 강력하게 추진한 것은 노무현 정권이었다. 그들은 노동자투쟁을, 열사들의 투쟁을, ‘테러리스트’로 몰아세우며 탄압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다.

자유화·개방화라는 이름으로 자본시장을 투기자본에게 완전히 개방해 론스타, 쌍용차와 같은 먹튀자본의 놀이터를 만들어놓은 것도 노무현 정권 시절이다.

이 뿐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은 주한미군기지 평택 이전 합의, 이라크 파병 등, 미국의 침략동맹에 적극 협조하였다.

그런데 국참당이 누군가.

바로 “노무현의 삶을 당원의 삶과 당의 정치적 실천을 규율하는 거울로 삼을 것”을 창당 정신으로 삼은 정당 아닌가.

따라서 3자통합당은 ‘진보-신자유주의 연합정당’이며, 진보정치를 표방해온 민노당과 노회찬 · 심상정 · 조승수로 대표되는 통합연대가 진보정치를 배신한 것을 뜻할 뿐이다.

강령을 보더라도 3자통합당이 진보정당이 될 수 없다.

민노당은 국참당과 통합을 위해 강령안에 있던 “사회주의적 이상과 지향”을 삭제하였다.

3자통합당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갔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정당 건설을 위한 합의문에 담겼던 “세계 변혁운동의 이상과 역사적 성과 계승, 자본주의 한계와 폐해 극복”마저도 3자통합당 강령에는 담기지 않았다.

그 결과 3자통합당 강령은 “보편적 복지사회 건설, (비정규직 철폐가 아닌)비정규직 문제 해결, 6.15와 10.4 선언 이행” 등 민주당과 다를 바 없는 강령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국참당이 ‘과거를 반성했다’는 3자통합 주창자들의 주장은 기만이다.

국참당이 변해 진보정치세력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다. 오히려 민노당과 노회찬 · 심상정 · 조승수로 대표되는 통합연대가 국참당의 자유주의적 강령에 완전히 끌려간 것이다.

심지어, 통합당 내에서는 당명에 ‘노동’이 들어가는 것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그 결과 3자통합당의 당명은 ‘진보통합당’이 되었다. 이는 노동의 중심성을 스스로 부정하면서 신자유주의세력과 함께 하는 것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실례다.

진보정치의 핵심인 변혁성과 반자본주의 전망을 담지 못한 강령을 가지고, 자본의 이해에 굴복하는 자유주의세력과 함께하는 정당.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확보와 덩치를 키우기 위해 원칙도 없이 합당하면서, 이런 정당을 ‘진보정당’이라 참칭하는 것.

이것이 3자통합당의 실체다.

그래서 3자통합당 건설은 김대중 · 노무현 정권 등 자유주의 정권 아래서 고통받고 투쟁해온 노동자민중과 수많은 열사들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에 염원을 자유주의세력에 팔아먹은 행위다.

## 02

### 민주노총은 3자통합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게 맞는가?

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므로 민주노총이 지지할 정당이 될 수 없고, 배타적 지지는 더더욱 안된다. 민주노총이 통합당을 지지하게 되면 민주노조운동의 기본 원칙마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2012년 1월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을 채택할 예정이다.

그런데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로 승계시키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 → 민노당의 3자통합당 참여 → 민주노총의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라는 3단 논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3자통합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므로 민주노총이 지지할 정당이 될 수 없다.

배타적 지지의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

더욱이 3자통합당 추진과정에서 민주노총 내의 토론과 의견수렴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받는다는 근거 아래, 민노당 지도부는 민주노총의 의견수렴도 없이 3자통합당 건설을 강행했고, 민주노총 지도부는 민노당 지도부의 행보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래놓고 통합했으니 배타적으로 지지하라는 것은 조합원들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이다.

만약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민주노총 방침으로 결정한다면, 이는 민주노조운동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계급성과 자본에 대한 투쟁을 생명으로 하는 민주노조운동이 진보정당이 아닌 정당을 배타적으

로 지지하는 사태는 민주노조운동의 정체성을 급격히 무너뜨릴 것이다.

3자통합당 지지를 둘러싼 민주노총 내의 찬반 논란을 가져오면서 노동현장을 분열시키는 한편, 반자본 변혁지향성 ·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핵심으로 하는 노동자 정치의 좌표를 심각하게 뒤흔들어 놓을 것이다.

## 03

### 배타적 지지방침,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독인가 약인가?

배타적 지지방침은 정치적 대리주의를 양산하고 노동자들의 다양한 정치경험과 선택의 기회를 박탈한다. 또한 배타적 지지방침은 현장의 혼란과 분열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추긴다.

민주노총은 3자통합당이 민주노총의 지지대상, 더 나아가 배타적 지지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방침만 결정하면 되는가?

아니다.

지지대상이 그 누구든 배타적 지지방침 그 자체가 문제다.

배타적 지지는 말 그대로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정치조직)만을 지지하고, 특정 정당(정치조직)은 그 배타적 지지에 기반해 자신을 유지 · 성장시키는 전략이다.

그런데 이는 노동자 정치세력화에 ‘득’이 되기보다는 ‘독’으로 작용한다.

당은 노동조합의 조직적 지지결정에 의존할 뿐 자신의 독자적인 활동을 통해 노조(대중)로부터 신뢰받고 검증받는 것을 게을리 하게 된다.

조합원을 선거 때 몸대고 돈이나 대는 정치활동의 대상으로 전락시킨다.

그래도 별 문제가 없다. 배타적 지지라는 강철같은 방침이 있으니.

더욱 큰 폐약은 노동조합에서 나타난다.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정치의식과 정치(투쟁)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조의 독자 사업을 방기한다.

노조의 정치활동을 지지 정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와 선거 때 돈대고 몸대는 것으로 대신한다.

그 결과 자본가 정치와 다를 바 없는 ‘정치적 대리주의’를 끊임없이 만들어낸다.

배타적 지지를 받는 세력이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치활동을 못해도, 무조건 지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지난 10여 년 간 배타적 지지로 엮어진 민주노총-민노당 간의 관계가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 뿐인가.

배타적 지지 정당이 아니지만 노동자 정치(진보정치)를 추구하는 다른 정당(정치조직)의 노조 내 활동과 이 정당(정치조직)에서 활동하거나 이를 지지하는 조합원들의 정치활동을 가로막는다.

그 결과 조합원들은 노동자 정치(진보정치)세력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정치노선과 정치활동을 접할 기회를 박탈당한다.

그 결과는?

노조와 노동자의 정치역량을 강화시키기보다는 협소화시키고 악화시키는 것이다.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대답에서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진보정당에 대한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현실에서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게 한 것은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방침이었다.

MB 정권 들어, ‘민주노총의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 민노당의 야권연대 방침 → 민주당 · 박원순 등의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민주노총의 지지’라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배타적 지지방침은 노동자 정치를 훼손시켰을 뿐 아니라, 현장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2년 강원도지사 재보궐 선거가 그 단적인 예이다.

민노당이 민주당과의 야권연대로 민주당 후보를 단일후보로 합의하자, 민주당 후보 지지에 대한 찬반을 둘러싸고 민주노총 내부는 갈라졌다.

심지어, 민주당 후보 지지를 반대한 민주노총 강원본부에 대해 정치방침 위배까지 운위되었다.

2002년 지사체선거에서도 당시 조돈희 울산해북투 위원장이 사회당 정당연설회에 가서 연설했다는 이유로 민주노총 정치방침 위배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민주노총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민주노총 정치방침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라 문제가 안 되고,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은 정치방침 위배가 되는 웃지못할 상황이 나타난 것이다.

배타적 지지방침은 현장의 혼란과 분열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부추긴다.

따라서 배타적 지지방침, 그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 04

### 배타적 지지방침을 없애는 것은 자본가정당에 대한 지지까지 열어두자는 건가?

아니다. 자본가정당이 아닌 노동자(진보)정치 세력들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면서 선거시기에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기초해 노동자(진보)정치세력들을 지지하고 연대하면서 선거투쟁을 벌이면 된다.

배타적 지지방침을 없애자고 하면,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배타적 지지방침이 있어야 “민주노총이나 조합원들이 자본가정당을 지지하지 않게 되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노동조합이 자본가 정당을 지지하거나 이들과 연대할 수 없다”는 것은 노동자 정치의 기본 전제이다.



즉 배타적 지지방침을 폐지하자는 것은 노동조합이 자본가정당에 대한 조직적 지지를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 정치(진보정치)를 추구하는 정당(세력)들 중, 특정 정당(정치조직)만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노조운동이나 정당(정치조직)운동 모두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민노당의 반MB 야권연대 방침과 3자통합당의 출범으로, 배타적 지지방침이 자본가정당인 민주당이나 진보정당이 아닌 3자통합당을 지지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 시기 배타적 지지방침의 현실 아닌가.

더욱이 배타적 지지방침을 폐지했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다.

노동조합은 여러 노동자 정치(진보정치) 세력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가운데, 선거 시기 노동자 정치(진보정치) 세력의 활동과 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노동조합의 입장에 근거해 특정 또는 복수의 정치세력에 대한 연대와 지지관계를 맺으면 된다.

실제 민주노총은 훌륭한 선례를 갖고 있다.

1999년 2기 민주노총은 “노동자계급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제 정치조직에 민주노총 조직원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고, 제 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대중조직 고유의 상대적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제 정치조직과의 연대, 지지·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민노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으로 사문화된 이 방침의 의미를 이제 다시 되살려내야 한다.

## 05

### 제 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이 답인가?

진보대통합이 실패로 끝난 지금 다시 진보대통합을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해답이 될 수 없다. 특히 과거에 대한 진지한 평가와 성찰 없이 무 원칙한 통합논의는 단결이 아니라 더 많은 혼란을 낳을 것이다. 또한 배 타적 지지방침이 전제된 진보대통합은 기존 민주노동당 운동의 오류와 한계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2009년부터 계속 제 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얘기해 왔다.

그 핵심내용은 모든 노동자 정치(진보정치)세력은 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이라는 ‘하나의 당’으로 뭉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진보대통합당이다.

물론 이 안에도 입장 차이는 있다. 진보대통합이 실패로 끝난 지금,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와 진보대통합당 건설을 병행 추진하자는 것이 그 하나다.

또 다른 입장은 3자통합당이 대통합당이 아니고, 3자통합당에 대한 민주노총 내 이견이 있으므로, 일단 3자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방침을 유보하고,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면서 이 당과 민주노총이 배타적 지지관계를 맺자는 것이다.

진보대통합정당 건설을 주창하는 근거는 무엇까?

“진보정당의 분열이 현장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게 하나의 근거다.

“뭉쳐야 진보정치의 힘이 커진다”는 것도 또 다른 근거의 하나다.

나아가 민노당이 그간 계속 주장한 것으로, “한국은 분단사회라는 특수성이 있어,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진보정당이 하나여야 한다”는 논리도 보태진다.

이러한 민주노총이 중심에 서서 진보대통합당을 건설하겠다는 입장은 배타적 지지방침에 근거한 민노당-민주노총 구도를 다시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이는 배타적 지지방침에 근거한 잘못된 정치세력화 구도를 다시 되살리겠다는 것이다.

“복수의 진보정당이 있으면 현장이 분열되고, 조합원이 혼란스럽다”는 논리도 근거가 없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둘러싼 지금의 혼란과 갈등은 민노당이 민주당과 연대에 집착하면서 노동

자 정치를 희생시키고, 자유주의정당과 연합하여 3자통합당을 건설하는 등, 노동자 정치를 완전 파탄내고 있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노동자 정치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의 진보정당이냐 복수의 진보정당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말해준다.

물론 뭉치면 힘이 커진다.

그러나 원칙과 근거없이 뭉치면 이는 야합이고 파탄이다.

노동자 정치(진보정치)를 추구하더라도, 노동자 정치(진보정치)의 목표와 이를 이루기 위한 상이 다르다면 같이 하는 게 더 문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모두 노동조합 조직이지만 따로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

만들어진 역사성과 같이 할 수 없을만큼 운동노선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가능한 폭넓게 대중을 포괄해야 하는 노조도 그럴진대, 정당(정치조직)은 말할 것도 없다.

하나의 당으로 뭉치지 않는다 해도 노동자 정치(진보정치)의 대의를 위해 각 정당(정치조직)은 충분히 연대할 수 있다.

한국사회의 특수성 운운도 근거없다.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단사회의 특수성이 왜 복수의 진보정당(노동자정당)이 존재하면 안되는 지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근거를 제출한 적이 없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통합 주장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역사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자기반성’이 없다는 점이다.

민노당 출범시 설정한 정치세력화의 방향과 배타적 지지방침은 옳았는지, 2007년 민노당 대선 참패 원인은 뭔지, 민노당의 분당의 원인은 무엇인지, 반MB 야권연대를 어떻게 볼 것인지, 왜 현장에는 정치적 냉소주의가 팽배한지, 지금 노동자 정치세력화에서 막혀있는 지점은 무엇인지 등.

이것들이 모두 평가되었을 때, 민주노총이 말하는 제 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힘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없는 기치는 ‘반성없고 내용없는 묻지마 통합’이자,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실패 원인에 철저히 눈감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현실이 보여주고 있다.

바로 노동자 정치에서 이탈한 기형적인 3자통합당의 출현이다.

# 06

## 2012년 노동자 정치의 핵심과제가 원내교섭단체 구성과 진보적 정권교체인가?

노동자정치에의 핵심과제는 수구 대 개혁,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노동자민중 투쟁의 열망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반MB-한나라당 심판론을 넘어서는 반자본 투쟁을 통해 자본 대 노동의 구도로 세워내는 것이다.

3자통합당 및 이를 지지하는 현장활동가들은 야권연대를 통해 3자통합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뤄내고 진보적 정권교체를 하면 정리해고제 및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악법들도 재개정할 수 있다고 한다.

한미FTA 철폐, 무상교육·무상의료 등 노동자민중들의 핵심적인 권리와 요구들을 교체된 정권 아래서 실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세력의 원내교섭 단체 진출을 위한 국참당과의 통합은 불가피한 일이고 민주노총은 그런 3자통합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세력과 함께 하고 있는 3자통합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면 당면한 주요 현안들이 해결되고,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악법들이 없어질 수 있는가?

20석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소수당일 뿐인 3자통합당이 이를 실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나중에는 의석수가 모자라서 관철시키지 못했다고 발뺌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운동의 투쟁·조직력을 강화하기 보다는 더 많은 의석 확보를 위해 지금보다 더 무원칙한 정치로 노동자를 내몰 것이다.

이 속에서 노동운동은 더욱 우경화되고 계급적 단결은 무너질 것이다.

이른바 진보적 정권교체의 실체인 ‘야권연대를 통한 정권교체’는 어떤가.

최근 민주당과 혁신과 통합이 연합해 창당한 민주통합당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세력이다.

이미 경험한 것처럼 이들이 정권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정치적 기반과 노선으로 볼 때, 노동유연화,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이름으로 한미FTA와 같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을 필연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미 이들은 한미FTA 폐기가 아니라 재협상을 말하고 있다.

한미FTA를 막아내는 투쟁이 아니라 국회 등원을 통한 한나라당과 협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무상교육·무상의료를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실현에 대해 숫자놀음을 할 뿐 실질적인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

오히려 영리병원을 찬성하고, 사교육 확대를 인정한다.

최근에도 이들은 ‘한미FTA 자체를 반대하는 근본주의자들과 생각이 다르다’며 FTA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했다.

그들이 정리해고제, 근로자 파견제를 철폐하고, 노동3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공무원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완전 보장하는 것은 과거에는 물론이거니와 미래에도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터져나오는 노동자들의 투쟁요구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해결책을 내놓을 것이다.

이것은 자본가정당인 그들의 필연적 길이다. 이를 압박할 수 있는 힘은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 행정부에 참여해 장관 자리를 차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힘은 바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있을 뿐이다.

노동자 정치운동의 핵심과제는 ‘선거 심판론’이라는 이름으로 원내교섭 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반MB 흐름 속에서 ‘노동’의 독자성과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반자본투쟁을 조직해나가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정치세력 간의 대립구도에 불과한 수구(반민주) 대(對) 개혁(민주)이라는 정치구도에 노동자민중운동을 종속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자본투쟁을 통해 자본 대(對) 노동의 정치로 발전시켜나가는 것이다.

정리해고제·근로자 파견제를 비롯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각종 노동악법에 대한 완전 철폐,

한미FTA 폐기, 노동기본권 완전 보장을 사회적으로 공론화시켜내고 대중투쟁력을 강화시켜내는 것이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전면화되고 있는 자본의 경제위기 고통 전가 공세에 맞선 계급적 대안을 제기해나감으로써 노동자민중의 권리를 방어해내고 노동자계급의 정치적·조직적 힘을 키워나가는 것이다.

이 속에서 개혁과 진보를 합쳐 노동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진보민주세력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정치가 전체 민중들에게 정치적 대안으로 서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2012년 노동자 정치운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세워나가야 한다. 반MB로 결집하여 투쟁하는 대중들 속에서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의 실체를 확인시켜야 한다. 박근혜도 말하고, 민주당도 말하는 ‘복지’가 아니라 ‘노동권’을 말해야 하고, 한미FTA 반대에 그냥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폐기’를 주장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는 더더욱 ‘계급’의 문제를 확고히 틀어진 정치를 펼쳐내야 한다.

## 07

### 민주노총 정치방침 토론안,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노총 정치방침 토론안은 사실상 통합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를 방침으로 내고 있다. 이것은 노동자정치의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 이자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자주성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선거방침과 정치방침을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방침은 야권연대 지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정치방침은 사실상 3자통합당에 배타적 지지를 계승하겠다는 내용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민주노총이 지난 13년간 전개해왔던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민주노조운동의 계급성·자주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우선, 정치방침 수립 없이 선거방침을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해 추진한다는 것은 민주노총이 스스로 원칙 없는 조직을 만드는 꼴이다.

따라서 선거방침은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이 수립된 이후 그 원칙 아래에서 결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노총 지도부가 우려하는 ‘현장의 혼란과 분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미 지난 4.11 지자체 선거에서도 현장은 많은 혼란을 겪은 바 있다.

당시 강원도에서는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산별마다 기자회견을 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속에서 민주노총의 소위 배타적 지지방침은 사문화가 되었고 민주당에 대한 지지 여부로 현장이 분열되고 말았다.

“신자유주의 세력과 계급연합은 하지 않는다”는 민주노총 위원장의 발언은 공문구로 전락했으며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은 지자체 선거에서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었다.

둘째, 선거방침은 야권연대를 핵심 기조로 제출함으로써 노동자 정치운동을 뿌리째 흔들고 있다. 민주노총은 야권연대로 정책협약을 맺어 노동조합의 주요 현안문제들을 해결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2012년 총대선에서 민주당 등 신자유주의 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열어두는 것을 넘어, 야권단일화를 압박하는 세력이 되었다.

이는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뿌리를 근본에서 뒤흔드는 일이다.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후보가 민주당인 상황이 연출되고 노동자 정치의 독자성을 강조하면서 야권연대에 참여하지 않고 나오는 노동자후보가 민주노총에 의해 부정되거나 강제로 진압되는 상황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은 더 큰 혼란이자 분열이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민주노총 지도부가 자초하는 상황을 만들게 하는 것이 바로 중집에서 결정한 선거방침의 내용이다.

셋째,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배타적 지지방침에 대한 제대로 된 토론과 평가 없이 3자통합당으로 배타적 지지방침을 계승하려 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해 정치방침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정치방침은 지난 11년간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추진해 왔던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에 대한 총체적 평가에 기반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순식간에 3개의 정치세력들의 결정으로 통합당이 출현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었다.

배타적 지지라는 강력한 지지를 등에 업고 의회에 진출한 민노당에 대해 민주노총은 아무런 발언력도 가지지 못했다.

이대로 대중조직은 당의 2중대로, 돈과 투표만 조직하는 부대로 전락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가 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민주노총 스스로 이제는 배타적 지지방침을 통해 정치세력화를 추진해왔던 민주노총 정치방침에 대한 근본적 평가를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 간부대오(활동가들)를 비롯해 광범위한 현장토론을 진행해야 한다.

넷째, 3자통합당을 진보정당으로 승인하면서 노동자 정치운동의 ‘정체성’을 훼손하고 있다.

이번 ‘정치방침 토론안’에서는 3자통합당이 과연 진보정당인가를 둘러싼 문제가 핵심적인 토론 주제로 등장하고 있다.

통합당을 둘러싸고 이미 현장은 혼란에 휩싸여 있다.

진보대통합이 어느 순간 신자유주의 세력과의 통합으로 둔갑한 것도 놀랄 일이지만, 결국 진보대통합이라는 주장이 야권연대로 가는 수순밟기였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시기 “신자유주의 세력과는 계급연합을 하지 않는다”는 말도 스스로 부정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2004년의 열사정국을 기억하는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을 비롯한 대공장 노동자들의 투쟁을 ‘귀족노동자’, ‘집단 이기주의’, ‘밥그릇 지키기’로 몰아세웠던 대통령을 기억하는 노동자들에게,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알케에다와 같은 테러리스트로 규정했던 그 정권을 기억하는 노동자들에게 이는 혼란을 넘어 분노스러운 일이다.



# 08

## 민주노총 정치방침,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나?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노동자정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당과 노조의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대중주체의 정치활동을 통해 노동자정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방침이 되어야 한다.

민주노총 정치방침은 네 가지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

첫째, 자본가정당과 분명히 선을 긋고 노동자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운동을 펼쳐야 한다.

둘째, 노동해방·평등세상이라는 지향점을 ‘자본주의 극복과 변혁추구’로 구체화해야 한다.

셋째, 당면한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에 기초한 대중투쟁(운동)의 강화 발전이라는 방향 아래 노동자 정치를 추구해야 한다.

넷째, 대중들이 유권자, 지지자로 전락되지 않고 노동자 정치의 주체로 서갈 수 있도록 대중정치 의식의 발전과 정치실천의 확장을 적극 꾀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 ① 계급조직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하는 정치운동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부르주아 정치와는 분명히 다른 노동자 정치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을 방침으로 정해야 한다.
- ② 노동자 정치의 확대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다양한 노동자 정치세력에 대해 지지하고 연대한다”는 방침을 결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이 일상에서도 노동자 정치운동의 다양한 실천들을 쉽게 접하고 함께 토론하면서 스스로 정치운동의 주체로 서나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와 활동을 넓혀내야 한다.
- ③ 당과 대중조직이 상대적 독자성을 가지고 비판과 연대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대중조직이 당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이 속에서 대중운동의 변혁지향성을 다시금 복원하고 대중투쟁(운동)을 더욱 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3자통합당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

3자통합당은 노동자 정치의 출발점이었던,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넘어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서나간다”는 노동자 정치의 기본 원칙을 깨뜨리고 신자유주의 세력과 야합한 정당이다.

이를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기만이다.

통합당은 결코 노동자 정치세력운동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나아가 배타적 지지방침을 폐기하고 ‘자본주의 극복과 사회변혁을 추구하는 정당, 노동자투쟁에 함께 하는 투쟁정당, 노동자계급의 중심성을 분명히 하는 정당(정치조직)들에 대한 지지와 연대를 정치방침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러했을 때, 제2의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이 민주노총 정치방침이 수립될 수 있도록 투쟁해야 한다.

- ▶ 3자통합당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운동의 대의에 어긋나는 정당으로 진보정당이 아니다.
- ▶ 민주노총은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의 대의에 입각하여 활동하는 제 정당(정치조직)에 조합원이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위 조건에 부합하는 제 정당(정치조직)과의 관계에서 대중조직 고유의 상대적 독자성 아래 연대, 지지관계를 형성한다.
- ▶ 민주노총은 노동자 독자적 정치세력화운동이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전개될 수 있도록 정치교육과 실천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간다.
- ▶ 민주노총의 정치방침에 근거해, 선거방침은 민주노총이 정한 투쟁·정책요구에 입각해 활동하는 후보에 대해 지지·연대한다.

## 09

### 3자통합당·진보대통합당이 대안이 아니라면, 노동자 정치운동의 대안은 무엇인가?

노동해방·평등세상을 위해 투쟁하는 정당, 자본주의 극복과 사회주의 실현을 지향으로 삼는 정당, 노동자계급을 주체로 세우는 민주적 계급 정당이 바로 노동자정치운동의 대안이다.

1996~97년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세계 노동자운동의 주목을 끌기도 했던 한국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민주노조운동은 물론이고 노동자 정치운동에도 많은 영감과 동력을 주었다.

총파업이 추구한 목표 가운데 하나는 DJ세력으로 대표되었던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극복하고 노동자계급이 독자적인 정치의 주체로 서겠다는 것이었다.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정치, 이것이 바로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출발점이었다.

노동자 정치가 자유주의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와 단절하고 독자적 정치를 하고자 했던 것은 노동자 정치가 목표로 하는 사회와 자유주의세력이 목표로 하는 사회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정치의 방향과 이념을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

그것은 무엇인가.

‘노동해방’, ‘평등세상’으로 외쳤던 새로운 사회에 대한 노동운동의 염원은 이제 ‘자본주의 극복’, 자본주의 이후의 대안사회인 ‘사회주의 지향’으로 보다 분명해져야 한다.

노동자 정치는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정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본에 맞선 투쟁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현 시기 노동자 정치는 반MB를 넘어 반자본투쟁으로 나가야 한다.

한미FTA 폐기,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 야간노동 철폐와 획기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실업 해소, 자본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통제, 기간산업과 독점자본 사회화 등의 요구가 그것들이다.

이는 자본에 맞선 투쟁임과 동시에 자본주의를 극복한 대안사회를 열어갈 핵심투쟁이다.

반자본 투쟁은 최근 유행하는 ‘복지’담론에 노동자 정치가 갇히지 않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3자통합당이 목표로 하는 복지국가 건설은 무엇인가.

‘복지국가’는 자본에 대한 노동착취와 노동지배 그 자체를 문제삼지 않는다.

이는 당연한 것으로 전제한 채, 그 폐해를 복지정책으로 보완하려 할 뿐이다.

비정규직의 심각성을 얘기하지만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대안으로 제출하지, 비정규직 철폐를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니 자유주의세력의 통합정당인 민주통합당이 기치로 내건 복지와 그 차별성이 없어져 버렸다.

노동자 정치는 노동자계급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것이다.

민노당 운동으로 대표되었던 노동자 정치의 역사는 노동자들을 표찍고 돈대는 유권자로 전락시키면서, 정치적 대리주의를 양산했다.

이는 자본가 정치방식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노동계급의 직접정치’라는 방향 아래 노동자대중이 정치의 주체로 서나가도록 정치활동을 펼쳐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의회를 활용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의회진출 그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것, 의회진출과 행정부 장악이 제 일의 목표가 되는 것은 노동자 정치가 될 수 없다.

선거에서 표를 더 많이 얻기 위해 한국노총을 찾아가고, ‘노동’의 이미지를 지우고, 강령에서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을 삭제하고, 중요 정책의 수준을 낮추는 것은 의회주의 정치세력화의 필연적 귀결이자 노동자 정치의 파탄이다.

더욱 분명하게 노동자의 계급적 요구를 제기하고, 자본주의를 변혁할 것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투쟁하는 것, 노동자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기 위한 활동하는 것, 노동자 정치운동이 출세주

의자들로 들끓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는 자들로 가득차야 한다.

이를 통해 대리주의-의회주의로 가두어진 지난 노동자 정치운동을 넘어, 변혁의 정치, 노동자 직접정치, 거리의 정치, 현장의 정치를 세워야 한다.

분배의 정치를 넘어 생산의 정치를 세워내야 한다.

민노당 창당과 분당, 민노당의 자유주의세력과의 연합으로 지난 노동자 정치운동은 한 역사를 마감하였다.

이제 실패한 역사를 되살리려 해서는 안된다.

반자본주의·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 대중을 정치의 주체로 세우는 변혁적 투쟁정당, 노동자 계급의 이해를 옹골게 대변하고 노동해방을 추구하는 노동자계급정당이 건설되어야 한다.

바로 ‘사회주의 노동자정당’이 그 대안이다.

# 10

## 노동자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2012년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반MB-한나라당 심판을 넘어 당면한 노동자민중투쟁을 바탕으로 반자본 투쟁을 전개할 전국적공동투쟁을 벌여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제정치 세력, 노동운동, 민중사회단체들이 결집해 노동자민중투쟁의 정치적 성과를 또 다시 가져가려는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에 대당하는 전국적 공동투쟁전선을 만들어내야 한다.

2012년 노동자계급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곳곳에서 분출하고 있는 노동자민중들의 투쟁이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다.

총대선을 앞둔 2012년은 크고 작은 노동자들의 투쟁이 곳곳에서 벌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투쟁들은 지난 몇 년간 계속된 투쟁의 패배와 대중운동 내 실리주의의 확산, 선거심판론 등으로 갑자기 거대하게 분출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최근 투쟁양상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2010년 9명의 동희오토 노동자들이 거대한 현대자본에 맞서 투쟁하면서 민주노총이나 산별노조의 지침이 없어도 아래로부터 자발적 연대들이 이뤄졌다.

탄압에도 굴하지 않은 동희오토 노동자들의 투쟁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 여론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경험은 기륭으로, 한진으로, 이제는 쌍용차로 이어지고 있다.

이제 이러한 대중투쟁을 관통하고 있는 노동악법들에 대한 투쟁을 본격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 정리해고·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 경제위기를 노동자민중에게 전가하는 자본과 정권의 공격에 맞선 투쟁들을 반자본 투쟁으로 모아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장, 정치조직, 사회단체들을 망라한 전국적인 공동투쟁체를 구성하고 반자본 투쟁전선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또한 민주대연합-3자통합당으로 노동자 정치를 왜곡시키고 있는 반노동자적 흐름에 맞서, 광범한 정치적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지난 시기 노동자(진보) 정치운동을 대중적으로 평가해나가면서, 현장 노동자들이 정치의 주체로서는 새로운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본격화해야 한다.

사노위는 노동자 정치운동의 정체성과 계급성을 복원하는 활동, 대중투쟁의 발전과 강화, 반자본 투쟁전선의 형성, 노동자 정치운동의 우경화에 맞선 연대활동에 헌신적으로 복무해나갈 것이다.

이와 함께 노동자계급정치의 실현과 노동해방·인간해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운동을 본격화해 나갈 것이다.